한빛원전 안전 대응 '구멍'…전문성 외면 인사도 도마 위

안전건설위원회 행감

사고 정보 전달 지연·방재센터 원거리 등

원전안전팀장 등 직무 불일치 배치 질타

인사 적절성 논란에 閔시장 출석 요구도

한빛원전 사고 대응체계의 허점과 재난 담당 부서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 배치 문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10일 전남광주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의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빛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주민 정보전달체계 구축과 재난 업무에 맞는 전문 인력 배치를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한빛원전 5호기 화재 당시 민간감시기구 통보와 주민 문자 발송이 지연됐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을 언급하며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 의원은 "사고 발생 시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원전 인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광역방사능방재센터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전과 인접한 지역의 안전 여건을 고려해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재난 담당 부서의 인사배치 문제도 쟁점이 됐다.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원전안전팀장에 사회복지직, 자연재난대응팀장에 수의직 공무원이 배치된 점을 들어 업무 전문성과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원전안전팀장을 직접 발언대로 불러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와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기준 등을 질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기준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자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 시장이 강조한 적재적소 인사 원칙과 실제 인력 배치가 맞지 않는다"며 인사 기획관과 최종 인사권자인 민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순환보직과 기존 근무지 보장 등에 따른 인사상 제약을 설명하면서도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일 안전건설위원장은 시장과 인사 담당자의 출석 여부를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출석 요구 여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일 행정소방위원회의 자치분권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직렬과 담당 업무가 맞지 않는 인사배치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조석훈 자치분권국장은 일부 직렬 불일치 사례를 인정하고 보완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명진 기자



새청무 쌀로 만든 가래떡 나눔 10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가래떡 나눔 행사에서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과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이 출근하는 직원과 청사 방문객에게 새청무 쌀로 만든 가래떡을 전달하며 아침밥 먹기와 우리 쌀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 청년농 2천명 감소…지원책 재점검해야"

2022년 2만여명→2025년 1만8천여명

최미숙 시의원 "실효성 있는 뒷받침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사진**)은 최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농업인 감소와 스마트팜 경영 부담 문제를 짚으며 실질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주문했다.

10일 최 의원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 청년농업인은 2022년 2만300명에서 2025년 1만8천300명으로 2천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35개소에서 100개소로,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은 27개소에서 72개소로 확대됐다.

최 의원은 "청년농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설 확대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며 "임대농장 졸업생의 자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농 지속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신안 암태면의 바나나·망고 등 아열대 작목 임대농장을 사례로 들며 "높은 난방비와 물류비, 제한적인 판로가 청년농업인들에게 상당한 경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사업의 자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개소당 4억원의 사업비 중 20%인 8천만원을 청년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초기 자금 마련과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설 확대에 앞서 실제 영농 여건과 수요를 살피고 작목 선택부터 시설 관리와 판로 확보까지 세심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명진 기자

"5·18 50주년 기념식, 국가행사로 치러야"

정희선 시의원, 민주인권평화국 행감서 주문



오는 2030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식을 범정부 차원 국가행사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사진**)은 10일 민주인권평화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광주시는 5·18 5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범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나, 추진 상황이 대부분 사전 절차 준비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내년 12월 마스터플랜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지역 차원 기념행사를 넘어서 대통령실·국회와 협력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현재 확보된 국비도 5천만원 정도"라면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용범 5·18민주과장은 "50주년 기념행사에 30억~60억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행안부와 국비 확보를 협의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크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5·18 50주년은 단순한 일회성 기념행사가 아니라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세계적으로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예산 확보 전략과 TF팀 구성 과정에서 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광주·전남 응급환자 이송 영업구역 '일원화'

13개 업체·구급차 78대 시 전역 허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일부터 기존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었던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지역을 전역으로 일원화해 환자 이송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이송업체는 종전 행정구역별 허가 기준에 따라 지정된 영업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광주와 전남 간 응급환자 이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기존 영업지역의 경계를 없애고, 광역 단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남광주지역에는 13개 응급환자이송업체가 구급차 78대를 운영하고 있다. 종전 전남지역은 7개 업체 47대, 광주지역은 6개 업체 31대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영업지역 통합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별도의 변경허가 절차 없이 통합된 영업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